

‘광주형 일자리’ 광주 아닌 다른 곳에 넘기자는 여당 의원

이원욱 의원 국회 좌담회서 주장

여당 일부 의원들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광주에서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3일 광주시투자유치단이 노조와 합의해 합의문을 냈는데 거기에 막상 투자해야 할 기업, 고용주체인 기업은 빠져 있었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애초 취지가 ‘기업과 노동자 모두 함께 만들어 정부와 원원하자’ 인데 정착 투자 주체가 빠지고 이 내용에 일방적으로 들어오라고 하거나 기업이 맞춤형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협박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할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함께 모여서 광주형 일자리를 어떻게 새롭게 성공시킬까 고민해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닷새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공모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창원·거제·군산 등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를 포함해 공모형으로 전환, 광주형 일자리를 더 성공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윤후덕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광주에서 시작되는 좋은 소식이 이번 주에 꼭 들렸으면 한다”면서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 확장이 안 돼 대부분 정부 예산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가 이번 주 당사자 간 타결을 보길 기대하지만 안 된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형 예산으로 만들 수 있다”며 “공모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패키지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이 성사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배정 가능하다. 3당 간사가 합의하면 마지

“군산·창원·거제 등 관심

사업 성사 지역 예산 배정하자”

민주 지도부는 “합의 압박용”

막 예산시트가 닫힐 때까지 신규증액 예산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민병두·박광운·김정우·소병훈·최운열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에서 실무자가 직접 올라와 참관했다.

참석 의원들의 모두발언 이후 좌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윤후덕 의원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환 시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 이날 좌담회가 광주에서의 합의를 압박하더라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자는 취지로 열린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가 끝나면 또 1년이 늦어진다”며 “그래서 당내에서 공모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지역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경쟁하는 형식으로 하면 거기에 정부예산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한 번 토론해보자는 취지에서 열린 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당에서) 그런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광주에서 어떤 극적인 타협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김태연 정책위의장도 공모제 전환에 대해 “정책위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빛고을 산단 찾은 바른미래 지도부 “광주형 일자리 광주서 성사돼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당 지도부가 27일 현대자동차 완성차 합작 공장 예정 부지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등을 찾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손 대표와 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김동철·박주선 의원은 빛그린 산단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희망을 불어넣고 있으나, 여당인 민주당은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실망감

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돼야 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 잡아 타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사업이 광주에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노사는 대응적 차원의 양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라”며 “사업 성공이 벼랑 끝에 놓인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3년간 임금협상 유

예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며, 근로시간과 불량보장, 경영 참여 등 쟁점은 노사가 양보해달라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내년 광주에서 열린 수영선수권대회의 국가 예산 지원을 정부에서는 하지 못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져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했는데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다”며 “진정성 있게 해법을 모색할 때 해결된다”고 말했다.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노사가

새로운 일자리를 정착하려면 지역 지원이 필요한데 광주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가 내놓은 중재안의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해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노동계 측은 ‘임금협상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아니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 부분은 노사가 서로 3년 동안 임금에 대해 매년 동결하는 형식을 취해가며 유예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노동계가 우려하는 권리 침해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제3지역 추진도 안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7일 “광주형 일자리는 제3지역 추진이나 공모제 전환을 해서는 안 되며,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여당 일각에서 제3 지역론과 공모제 전환론이 언급되는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과잉증복부자로 70여만 대 생산시설이 남아도는 한국 자동차산업 몰락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미국 25% ‘관세 폭탄’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전면 철회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자체 분석 결과 ‘반값’ 임금 공장이자 불리는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 평균 초임이 4200만원(지자체 지원금 700만원 포함)으로 추산돼 현대차 초임 4800만원(성과급 800만원 제외)의 87.5% 수준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한국노총 등과 합의해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기존 일자리 빼앗기’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 당국자 “고노 일본 외무상 발언 사실이면 매우 부적절”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경경화 외교장관의 방일 가능성과 관련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문제 발언에 대해 “정확한 워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고노 외무상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외교관계를 관리하는 의무 대신으로서 비외교적인, 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국자는 사실 확인은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지난 26일 고노 외무상은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장관의 일본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경제정용 배상 판결, 위안부 재단 해산 등 한일 현안과 관련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일본에 오셔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2일 화해·치

유재단 해산,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한일 간 외교 갈등이 되는 사안의 논의를 위한 일본 방문 가능성에 대해 “지금 일정이 잡힌 것은 없지만 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한 채로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

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상호 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이은 일본 정부의 재단 출연금 10억엔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입장, 피해자나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그에 기초해 일본 측과 협의를 갖겠다”며 “그 앞부분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 에스&파트너스

광주에도 원팀(One-Team) 체제의 로펌이 출범하였습니다.

2018. 11. 1. 업무를 개시한 법무법인 에스&파트너스는 부장판사를 역임한 손진홍 변호사, 부장검사를 역임한 송길용 변호사가 하나의 팀으로 기업법무 등 송무와 자문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Needs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손진홍 변호사
광주 송원고, 한양대 법학과(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인천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남원시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송길용 변호사
광주조대부고, 조선대 법학과(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광주고검 검사, 대검 검철연구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 에스&파트너스
SONG·SON & PARTNERS

법률상담 문의. 062-229-8300
Fax. 062-229-8301 E-mail. snp8300@naver.com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 3·4층 (지산동)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화복·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라·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